

해외건설협회

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동향과 전망

연원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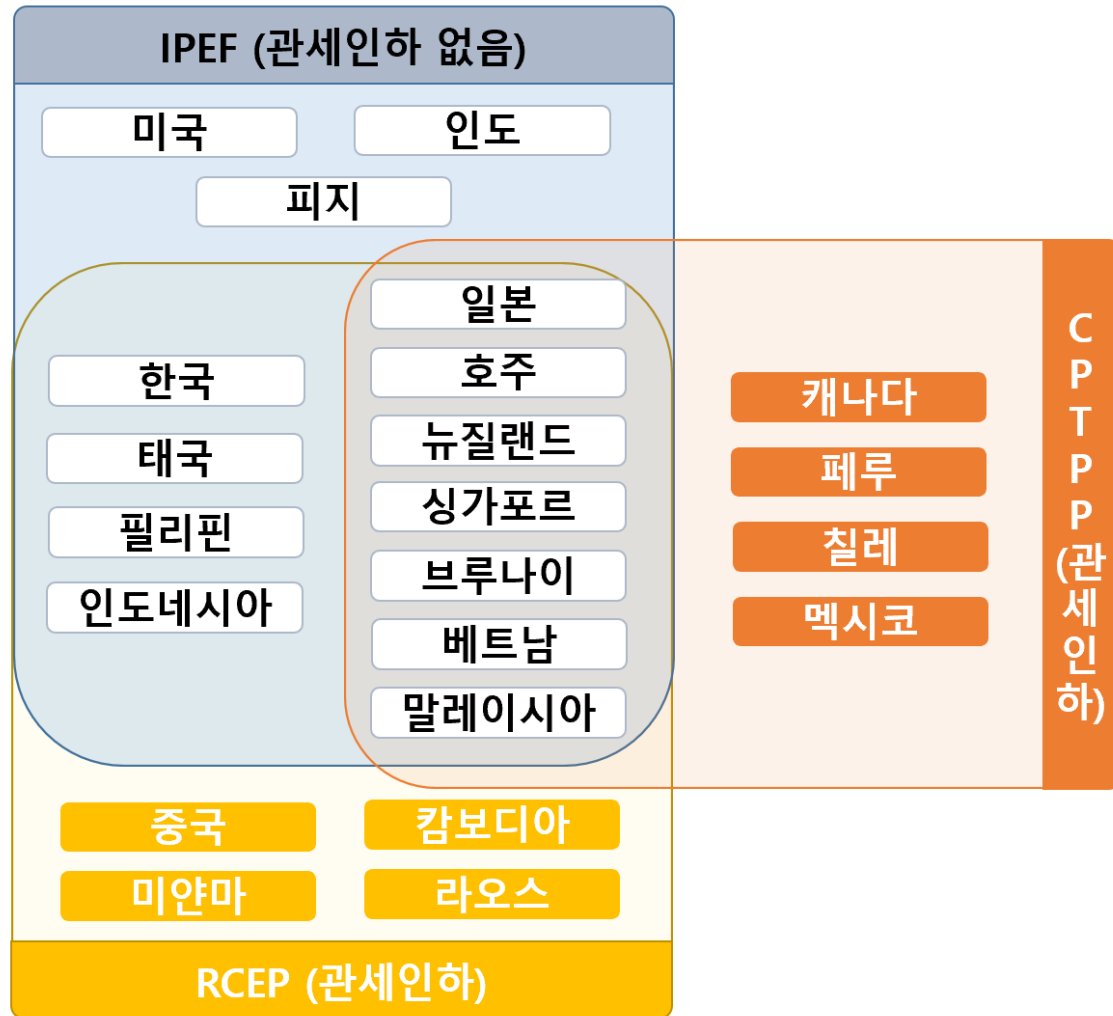
대외경제정책연구원
경제안보팀장
whyeon@kiep.go.kr

2022. 5. 25

I. Indo-Pacific Economic Framework (IPEF)

I. Indo-Pacific Economic Framework (IPEF)

IPEF 14개국



IPEF 개요

- **인태지역 내 미국의 리더십 재발휘와 중국 대응을 위해 경제안보차원에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강화 목적**
 - (2021.10.27) 바이든 대통령 ASEAN 정상회담에서 처음 언급
 - (2021.11.17) 러몬도 상무장관 IPEF의 공식적인 작업을 2022년부터 개시하겠다고 밝힘.
 - (2022.03.18) 공동선언문 수정안(draft statement)
 - 전통적 무역협정이 아닌 신통상의제를 다루는 새로운 경제안보협력체
- **IPEF 최초 6대 축**
 - △무역 원활화(디지털경제) △공급망 안정화 △인프라 협력 △탈탄소 청정에너지 △수출통제/외국인투자심사 △금융거래
- **IPEF 현재 4대 축**
 - 1) Connected Economy: 디지털 경제, 노동, 환경, 공정경쟁 등
 - 2) Resilient Economy: 공급망 안정화
 - 3) Clean Economy: 인프라 협력, 청정에너지, 탈탄소
 - 4) Fair Economy: 조세 및 반부패 (자금세탁 방지 및 투자 투명성 확보)

IPEF 개요 [계속]

■ IPEF의 삼각구도

1. (국무부) 블링컨 국무장관과 인도-태평양 조정관 캠벨은 안보동맹 강조
2. (상무부) 러먼도 상무장관은 첨단기술 및 디지털무역규범 강조
3. (USTR) 타이 대표는 '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'과 민주주의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파트너와의 구체적 성과 달성을 강조
 - ❖ 백악관 NSC 총괄하 USTR(무역)과 상무부(기타의제) 공동 주관

■ IPEF 특징

- 의제별 참여국과 협의 수준 및 추진속도가 다른 유연한 구조로 계획
- 의회의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행정협정으로 추진
- 정상급 행사를 통해 출범 → 직후 장관급 회의 개최 → 12~18개월 내 협상 완료

■ IPEF 참여국가

- 미국, 한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, 싱가포르, 베트남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태국, 부르나이, 필리핀, 인도
 - ❖ 1989 APEC 출범 12개국: 한국, 미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, 캐나다, 아세안6개국(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태국, 싱가포르, 필리핀, 브루나이)

IPEF 전망

- 미국의 의도는 CPTPP와 같은 다자체제를 만들기 보다는, 인도-태평양 지역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기존의 동맹 및 양자관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그것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는 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됨.
- 시장접근 제외, 노동자 중심, 환경기준 강화 등 미국 중심의 의제 구성으로 다른 멤버국가들의 참여유인 부족 및 구속력 미비로 회의적 시각 존재
- 민주당 내의 진보세력을 고려할 때, IPEF 내 무역자유화 논의는 당분간 이루어지기 힘들어 보임
 - 바이든의 가장 큰 우려는 무역정책이 의회 내에서 논의될 경우 자유무역정책을 옹호하지 않는 하원 민주당 진보세력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는 점임.
- 2022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고려하면, 당분간 미국 내 IPEF 논의에서는 블링컨 국무부장관 및 커트 캠벨이 강조한 대중 경제 논의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음.
 - IPEF를 활용하여 각종 경제안보 이슈에 대중국 '공동 노선' 구축을 희망

I. Indo-Pacific Economic Framework (IPEF)

IPEF 구조 및 주요 의제

구조		세부 의제	미국 내 주관 기관
Pillar1: 연결경제 (Connected Economy)	무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디지털 경제 (전자상거래, 데이터 이동, 디지털 인프라, 망중립성 이슈) 첨단기술 보호 (수출통제, 외국인투자심사 강화) 노동 / 환경 기준 (ILO, USMCA 기준의 강도 이슈) 무역원활화 (절차 및 규제 투명화) 	무역대표부 (USTR)
Pillar2: 회복력 있는 경제 (Resilient Economy)	공급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대를 통한 위기 대응 (G2G 채널) 공급망 정보 공유 (정부-기업 간, 공급기업-수요기업 간) 공동투자를 통한 기회 창출 (희소금속 등) 제품표준 통일 	상무부 (DOC)
Pillar3: 청정경제 (Clean Economy)	청정에너지/ 탈탄소/ 인프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규모 투자 및 기술개발을 통한 청정에너지원 다변화 (자원 및 인재수급의 문제) 환경기준과 공급망 재편의 문제 (Green Supply Chain, e.g. GSSA) 효과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후정보 공유의 문제 (풍력) 탈탄소 목표 성취 가능성 문제 (Global Methane Pledge, 2021.11.2 COP26) 	
Pillar4: 공정경제 (Fair Economy)	조세/반부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정 경쟁을 위한 조세제도 운용 및 투명성 확보 문제 자금세탁, 정부조달 관련 투명성 제고, Beneficial Owners(수익적 소유자) 문제 	

자료: White House(2022.5.23.), "Statement on Indo-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", "FACT SHEET: In Asia, President Biden and a Dozen Indo-Pacific Partners Launch the Indo-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"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

II. IPEF 관련 쟁점

IPEF의 형식 문제

- **현재 바이든 정부 TPA(무역촉진권한) 없음**
 - 美 헌법상 대외무역 협상권은 의회에게 있으나, TPA 법안은 협상권을 대통령에게 위임 (의회는 무역협약의 조건 및 목표만 행정부에 제시)
 - 효력 상실: ① 1994년~2002년, ② 2007년~2015년 ③ 2021.6.30 ~
 -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TPA 갱신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
- **행정협정 (executive agreement)**
 - 미국헌법 2조 조약 -> 군축, 인권 등 특정이슈에 한해 행정협정 가능
 - 미국헌법 1조 행정협정 -> 미국이 맺은 국제조약의 90%
 - 1) 2조 조약의 연장선에서 허가한 경우
 - 2) 의회의 권한을 받아서(congressional executive agreement)
 - 협상 전 의회 사전 승인
 - 협상 후 의회 사후 승인
 - 3) 대통령 고유 권한 (USJDTA: US-Japan Digital Trade Agreement)

IPEF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

■ 가능성 낮음

- 수단의 한계 : 2017년 THAAD 보복조치 여전히 유효
- 한중 간 교역 구조: 중간재-중간재 교역구조
- 미중 갈등 : 보복시 미국의 지원 가능성 큼
- 국내 정치일정 : 시진핑 3연임과 국내외 정세 안정

■ 중국의 진의는

- 1) 한국의 IPEF 가입을 실제적으로 막기위해서라기 보다는,
- 2) 중국 대내용 정치적 메시지(미중 갈등 차원)
- 3) 한국으로 하여금 한중 간 경제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IPEF 구체화 과정에서 반영해주길 원해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

각국의 계산과 전망

- 혜택**
- 신통상 의제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
 - 무역에 관한 규제·표준 등 비관세 장벽 개선
 - 인프라 정비 지원 및 기술 협력

국가	IPEF 가입 목적
미국	중국의 변화 유도보다 국익 추구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
호주	역내로 미국 불러들이는 것에 의의, CPTPP 참여는 안 하더라도 최 대한 비슷한 효과를 기대, 디지털 경제에 초점
일본	ASEAN 국가 분열 우려, 인센티브 부재로 큰 기대 없음, CPTPP 우선 (미국 복귀 희망)
뉴질랜드	APEC과의 차별화? 네거티브 협력보다 포지티브 협력 기대
싱가포르	수출통제, 투자심사 등 역효과 우려
인도	Pillar 1 관심 없고, Pillar 2, 3, 4에 초점
ASEAN	기술이전 및 인프라 투자 유치
대만	초청받지 못했으나 참여 희망, 참여국들은 부담

자료: 저자 작성

IPEF 대응방향

- IPEF 의제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, 우리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는 전략이 필요
 - 세계경제의 핵심 축인 인태 지역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역내 협력체 추진은 긍정적임
 - 일부 역내국은 IPEF 참여가 반중 동맹으로 비춰지거나 정치화되는 부분을 경계
 - 규제, 제재 조치보다 역내 국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미래지향적인 경제안보협력체로 추진될 필요
 - 관세를 낮추지는 못해도 서로 올리지 않도록 협력
 - e.g. 철강 232조 조치
 - 한미 FTA를 기반으로 IPEF를 통한 역내 경제협력 기회와 성과를 극대화
 - 시장접근에 대한 논의 필요 여부를 논의 ("collective discussions toward future negotiations")
 - ❖ CPTPP(시장접근) -----보완관계----- IPEF(신통상 규범)

감사합니다